

다중위기의 시대, 회색 코뿔소가 온다*

김성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

트럼프 2.0의 내각 구성이 마무리 단계다. 충성파를 중용하면서도 월가 출신, 친노동계 인사, 테크노 자유주의자들을 혼합하여 성장 지속과 개혁 과제들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시장이 내년 전망을 비교적 낙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 불확실성, 시스템 리스크,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회색 코뿔소(Grey Rhino) 유형의 위기가 동시 발생하는 다중위기(polycrisis)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트럼프 2기 내각이 진용을 갖추었다. 1기 내각이 트럼프주의자와 전통적인 공화당원의 연합이었다면 2기는 외연이 더 넓어졌다. 외교/안보와 이민, 법무 등 내치 담당자들은 충성파 트럼프주의자들로 채워졌다. 반면, 통상정책을 관장하는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는 강경한 관세론자를 내정했지만, 경제팀 전반적으로는 감세, 규제완화, 재정적자 축소 등 전통적인 공화당의 어젠다를 중시하는 인사들이 주축이다. 공화당 노선과는 거리가 먼 친노동계 성향의 인사를 노동부 장관에 발탁함으로써 다인종 노동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연방정부 개혁을 주도할 인사들은 일론 머스크 같은 테크노 자유주의자들을 선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정책의 여파로 아마존, 애플, 메타, 알파벳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민주당과의 밀월을 끝내고 트럼프 지지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내각 인선은 향후 마가(MAGA) 어젠다를 추진하더라도 경제성장, 물가안정, 증시 부양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결의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소로스펀드 이력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령탑에 스킷 베센트를 지명한 것도 그 일환일 것이다. 반면, 외교/안보, 이민, 법무, 교육, 연방정부 개혁, 규제 등의 어젠다는 기존의 충성파나 새로운 영입 세력들을 통해 다소 충격을 주더라도 안정보다는 변화에 초점을 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은 트럼프의 미국을 다소 낙관하는 분위기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부과를 협박해도 대부분 협상용일 것이라는 판단 속에 대중관세 인상폭은 10% 내외가 될 것이고 보편관세 도입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란 여전

성장과 개혁 과제의 병행 추진 도모

시장은 트럼프 2.0을
다소 낙관

또한, 관세 도입 시에도 규제완화나 감세, 암호화폐 붐이 경기충격을 상회할 것으로 평가한다. 인플레이션 재발 위험이 있지만 연준의 급속한 피벗(금리 동결 혹은 인상) 가능성은 낮게 본다. 과연 트럼프는 시장의 기대대로 성장과 마가 어젠다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 **트럼프 2.0에 내재되어 있는 복합적 위험을 직시할 필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과 정책
불확실성에 유의

첫째,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관세인상은 불법이민, 마약문제, 동맹국 방위비 분담 등에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인데 과연 그것을 중국에만 적용하는 것에 그칠까? 트럼프에게 호의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둘째, **정책상의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 감세 등은 단기간에 윤곽을 갖출 수 있겠으나 추방, 규제완화, 연방정부 개혁 등 다른 어젠다들은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시장이나 실물경제는 불확실성과 상극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감세, 규제완화 등의 기대감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해도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탈규제와 암호화폐
진흥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확대 우려

셋째, 규제완화나 암호화폐 붐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다. 머스크 등 테크노 자유주의자들은 일체의 규제로부터 해방된 기술고도사회를 희망한다. 빅테크 기업들만 아니라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도 개혁 대상이 될 것이다. 규제 없는 빅테크나 시장은 언제든지 시스템 불안 초래할 수 있다. 암호화폐 산업 진흥론도 위험하다. 비트코인을 정부(연준)가 매입하여 암호화폐 준비금을 조성하지는 주장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공론화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심하고 유동성 위험도 높다. 사이버 보안 위험에도 취약하다. 루비니 교수는 암호화폐를 모든 거품의 어머니에 비유하기도 했다. 거품이 커질수록 붕괴의 충격은 더 커진다.

정정불안 심화 및
보건위기 재연 가능성


넷째,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개혁 등 대내적 어젠다 추진에 따른 충격을 **현 시점에서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연방정부 개혁은 초강경 극우 보수의 논리로 점철된 <프로젝트 2025>의 행정국가 해체론, 대통령 권한 강화론 등과도 연결되어 있다. 연방공무원 해고, 정부기관 축소 혹은 폐지, 대통령의 예산 압류권 부활 등은 미국 사회를 **정정불안**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다. 다섯째, **보건위기의 재연 가능성**이다. 트럼프 2.0이 화석 에너지 개발을 촉진해도 단기간에 온난화가 재앙이 되지는 않겠지만 공중보건은 다르다.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예방접종이나

백신을 불신한다. 새로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러한 소신을 고집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제2의 섯다운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섯째, **제로섬 논리가 국제관계를 더욱 지배**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국내외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아직 컨센서스를 형성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등장 ‘이전’이 신자유주의와 세계시민주의에 기반한 질서였다면 ‘이후’는 아직 진행형이다. 중국 억제, 공정무역, 제조업 재진, 빈부격차 완화, 국익 최우선의 외교/안보 등의 핵심적 가치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나, 미국 내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뉴딜이나 신자유주의 질서와 같이 규범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까지 진전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국제관계의 구심력은 약화되고 원심력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최악의 경우에는 관세, 보복관세의 악순환으로 인해 사실상 공멸하고 말았던 1930년대와 같은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 일각에서 플라자 합의와 같은 주요국의 환율 조정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막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될 수 있다.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각국의 정책들로 인해 다자주의와 룰에 기반한 국제안보 및 협력 체제는 약화될 것이며 도처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공급망 분단이나 블록화도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트럼프의 미국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으로는 성장과 개혁(마가 어젠다) 간의 절묘한 균형에 성공하여 미국의 경기확장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경기과열, 물가 재상승, 금융시스템 균열, 미국내 정정불안, 지정학적 충돌, 팬데믹 재발 등의 위기가 순차 혹은 동시에 발생하는 **다중위기(polycrisis)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미리 감지되지만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대응하기 어려운 **회색 코뿔소(Grey Rhino)**나 **화이트 스완(White Swan)** 유형의 위기가 복수로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트럼프 2.0은 <프로젝트 2025>의 염원대로 ‘공화국을 구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제국의 몰락을 자극하는 촉매가 될 것인가? 트럼프는 제2의 링컨이나 레이건을 꿈꾸겠지만, 체제개혁 및 개방이 민족주의를 촉발하여 제국을 몰락시킨 고르바초프를 답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국제관계의
제로섬 논리 득세 속
지정학적 불안 고조

회색 코뿔소 등의
글로벌 다중위기 발생
가능성도 잠재